

김영삼 대통령은 3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계인사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물관리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대통령의 [환경복지 구상]을 발표했다.

환경복지구상

(환경부 제공)

김대통령은 이날 [환경복지구상]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모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녹색환경의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환경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김대통령은 또한 자연과 인간의 연대를 회복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환경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5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아울러 환경문제는 단숨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정부가 역점을 두어 나갈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환경자치체제 확대 등 7개 정책방향과 과제를 밝혔다. 대통령이 밝힌 이번 환경복지 구상은

조속한 시일내에 과제별로 정부의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대통령의 환경복지구상 발표에 앞서, 강봉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은 현재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부의 물관리 대책을 보고하고, 부처간에 분산되어 있는 수량·수질 관리를 연계·통합하는 물관리체계의 합리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의에서의 김대통령의 말씀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와 함께 지구환경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파괴를 이대로 방치하고는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전세계적으로 폭넓은 합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세기에 한 나라의 환경보전 수준은 바로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중심에 선 일류국가가 되려면 우선 환경모범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녹색 환경의 나라”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환경대통령]이 될 것을 여러분과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서로 의존하고 연대하며 사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는 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자연을 파괴해 왔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하는 삶은 자유와 평등, 행복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는 것을 새롭게 자각해야 합니다. 자연은 이제 더 이상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대지와 바다로부터 떨어져 살 수 없는 자연적 존재임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양식”과 “생각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구환경시대에 모범이 되는 환경공동체의 건설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환경공동체란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연대를 회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나는 이 환경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 수법]의 원칙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부행정은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경 정책에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확대하고, 환경과 파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환경정부의 상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환경과 경제의 통합] 원칙입니다.

환경과 경제는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은 대립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합니다.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공동책임과 생활 속의 실천] 원칙입니다.

환경위기는 정부·기업·국민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모두가 자각하고 공동으로 노력할 때만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환경보전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직장과 가정에서 환경과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사전예방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환경과 파괴는 쉽지만 복구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문화생활과 경제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안전]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 위해 요소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염원인자가 오염제거와 복구의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남북한 환경협력과 전지구적 공동노력]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금수강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의 환경 위기는, 지구를 하나의 환경공동체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외교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문제는 단숨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환경문제를 보는 기본 발상을 전환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앞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다음의 시책을 펴 나가자 합니다.

첫째,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제품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환경친화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염물질을 적게 발생시키는 녹색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비행태와 생활문화도 환경보전형으로 바뀌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자치체제]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환경을 가꾸고 관리하는 환경자치체제를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이 높아져야만 환경문제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넷째, [환경기준을 선진화] 하겠습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그린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규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청정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환경기초시설을 원비]하겠습니다.

물문제만큼은 해결될 수 있도록 물 관련 시설투자를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관거, 하수처리장, 폐기물매립장 등 환경관련 기초시설을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해양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섯째, [환경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화]하겠습니다.

국가의 모든 개발정책 수행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민총생산 개념을 도입하고, 교통·에너지 등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0년 주기로 환경영향을 재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환경관리기능을 통합 조정하겠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환경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기능도 보강하겠습니다.

일곱째, [환경외교]를 강화하여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오존층 파괴 방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등 국제협약이행에 앞장서고, 환경관련 국제기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환경면에서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울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이며,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국토를 보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의 아들·딸로서 자연과 친밀해지고 자연보호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공동체 건설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깊이 체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환경모범국가를 건설해 나가십시오.

대통령인 저부터 앞장 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3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12층에서 환경보전협회 주최로 환경부 환경정책실과 30대그룹 환경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환경정책과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정진승), 국제협력관 부이사관(최양일), 기술정책과 과장(김상열), 기술지원과 과장(고재영)이 자리를 함께 하여 30대 그룹 환경팀장들과 정부의 환경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바람직한 환경정책을

환경정책 간담회

모색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각 그룹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와 “환경기초시설 민간전문 운영관리체제의 도입”, 그리고 “총량규제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환경정책실장의 인사말과 기술지원과 고재영 과장의 정책을 먼저 소개하고 각 그룹들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편집부〉

한 경정책실장(정진승) : 환경보전협회가 마련한 환경정책 간담회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각 그룹의 환경팀장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환경보전협회가 기업에 대한 환경보전에 대한 역할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되며 환경부로서도 다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기업과 정부와의 사이에서 기업이 환경보전을 하면서 원만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정책은 규제가 많습니다.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기업이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오늘 참석하신 팀장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도 여러분들이며, 기업의 대표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도 여러분들입니다. 중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환경팀장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들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선 고재영 기술지원과장께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방안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전문 운영관리체제의 도입에 관해서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방안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환경친화기업이라는 기업이미지 제공과 각종 규제완화를 매개로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통하여 모범적인 환경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배출허용기준이내에서도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사후처리 중심의 환경관리에서 공정전체에 서의 원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환경문제를 무역과 연계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우리 기업의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87년부터 환경부에서 매년 시행해 온 “환경관리모범업소” 지정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로 개편되었다. 환경친화기업지정 신청은 신청서에 소정의 “환경영향평가 및 개선계획서” 20부를 첨부하여 관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고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활동개요
2. 환경관리일반현황
 - 가. 환경보전기본원칙

- 나. 환경전담부서의 조직, 인원, 기능 및 권한
- 다. 환경전담부서 이외 부서의 환경관련역할
- 라. 비상대응체계 구축현황
- 마. 작업장 환경. 안전 관리현황
- 바. 입지평가 및 입지상 환경관리 현황
- 사. 환경관련법규 준수현황 및 환경사고.민원현황
- 아. 환경관련 활동

3.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

- 가. 공정 흐름도 및 공정설명
- 나. 단위 공정별 물질 수지표 및 용수, 에너지, 오염물질별 사용·배출원 단위
- 다. 투입물(원료·연료·용수·유독물질등) 및 배출물(제품.반제품·부산물 오염물질 등)현황 (종류·농도·총량 및 관리현황)
- 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 마. 폐기물 관리현황
- 바. 유독물질 사용·관리 현황
- 사. 기타 환경관리(VOC·소음·악취·비산먼지·토양·지하수·off-site 관리및 국제환경협약상 준수 사항 등) 현황
- 아. 공정·기술·제품상 개선문제의 우선순위 평가
- 자. 국내외 동종 또는 유사업계 환경관리 현황조사 및 비교

4. 환경개선실적

- 가. 환경관리개선 세부사항
- 나. 환경기술개발·적용 현황
- 다.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및 생산현황

5. 환경개선계획표

- 가. 환경개선계획 내용
- 나. 환경개선계획의 실행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
- 다. 개선계획 이행시의 정량적인 환경개선 효과 전망
- 라. 기업환경비전으로서 중장기 환경개선방향

신청접수가 되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서류심사 및 현지 실사를 거쳐 환경친화기업 지정 여부를 확정하게 되는데, 지정받은 기업은 지정날로부터 3년간 그 지위를 부여받고 배출시설 허가를 신고로 대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의 원칙적 면제와 더불어 배출부과금의 감면조치 등의 우대를 받게 된다. 심사단의 구성은 심사단의 장은 환경정책실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화학, 전기, 기계, 금속, 기타업종 및 환경경영,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질분야로 구분하여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90인 이내의 전문가 및 환경부 소속 관련 공무원, 신청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직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현지실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은 5인 내지 15인으로 선정 운영된다. 또 현행 심사방법을 1회에서 3단계로 운영되는데 심사위원의 평가에서 환경관리청장의 자격심사, 심사위원의 평가 및 환경부 각국장(심사단장, 대기·수질·폐기물·유독물 국장)의 사정 등에 의해서 채점은 총 400점을 만점으로 해서 320점 이상이 되었을 때 지정을 받게 된다.(<표1>참조) 만약 ISO-14000 EMS 인증을 받은 업체로 친화기업 지정시 만점을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전문 운영관리체제의 도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종류별 전문관리방안을 도입하고 이를 통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운영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표2>참조) 대부분의 공공환경기초시설을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운영·관리하고 있어 잦은 인사이동 및 근무기피로 인하여 기술축적이 곤란하고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공공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기술인력 및 조직에 의한 전문경영관리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전문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사업을 추진·시설별 설계·시공 운영에 대한 최적관리방안 도출, 관련법령과 제도,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적정방안을 제시하고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공공환경기초시설별 적정 운영관리방안 마련 및 추진키 위해 지방공단 또는 공사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전담기관 설립, 민간전문업체 위탁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선경그룹(김병호 환경안전담당이사) : 기업에게 예고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간단체에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를 거쳐 심도 있게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정책추진시, 특히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오염자·수혜자 부담 원칙, 총량규제 등의 정책 유도를 이윤추구집단인 기업에게 재정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검토해 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이 경제원칙에 준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부건설(문일용 환경안전팀 팀장)
: 건설업종의 기업은 환경친화기업 지정 대상 업체가 아닌 것이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고재영) : 배출업소로 지정된 업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으로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외에도 유통, 운송업도 지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연구·개발하여 개선토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동부건설(문일용 환경안전팀 팀장)
: 동부건설은 종합건설업체로서 건설, 소음·진동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연관되어 있습니다. 친화기업선정에 있어서 건설회사현장을 단일기업으로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고재영) : 건설분야는 택지건설, 공단건설, 도로건설 등 매우 다양하여 업체로 볼 때 리스크가 크므로 지정하기가 어려우며 만약 사업장별로 한다면 심사해야 할 사업장이 많고 건설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볼 때 공정성이 결여되어 불만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렵고 계속 평가방법을 연구·개발중이니 앞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우그룹(김창열 환경경영팀 이사)
: 친화기업지정 기준중에는 사업장 규모에 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저희 대우중공업의 경우 큰 공장들이 5개이고, 또 이 공장들은 여러개의 공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분의 공장이 미비한 점을 갖고 있을 경우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어 대우중공업 자체의 문제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에 관한 지침이 없을 경우 환경친화기업 지정에 있어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지침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환경친화기업 지정에 있어서 지정 점수를 80점으로 하는 것보다 75점 정도로 낮춰 제도 자체를 권장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도 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저희 대우그룹은 제도와 관계없이 환경친화그룹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도의 경우 도전체에서 발생하

는 쓰레기중 95%는 매립처리하고 5%만이 소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대우조선에서 현 16톤규모(효율60%)의 소각로를 30톤규모로 설치준비중에 있는데 이 소각로보다 거제도 전체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30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만약 대형소각로가 건설된다면 도의 쓰레기매립장의 사용 기간도 훨씬 늘어날 뿐만 아니라 위생적 처리가 되므로, 대형 소각로 건설에 따라 거제도와 협의시 환경부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시 환경개선명령은 대기업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양산공장에서 환경부에 가성소다통 설치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책임자와 감사책임자가 달라 가성소다통밀에 파이프를 설치해야 한다, 철판위에 떨어지면 안된다고 하여 스텐레스 받침대를 설치하는 등 조치가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언론에 보도된 것이 대우그룹은 유독물을 배출하고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고재영) :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환경친화기업지정의 차별이 없는 것은 오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체에 차등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행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연구중에 있으며,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포항제철(김명환 환경기획팀 팀장)

철강업계에서는 다량 슬래그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처리 시 고가로 인해 자연산 골재가 너무 싸기 때문에 타건설자재와의 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세제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또 정부 각부처별로 국제협약에 대해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환경담당업무자가 바젤협약 등과 같은 국제협약에 대해 환경보전지와 같은 정보지를 통해 알기 쉽게 내용을 보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한해 동안의 국제협약 진행사항들을 년 1-2회를 거쳐 보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국제협력관 부이사관(최양일) : 바젤협약에서는 슬래그뿐만 아니라 유해폐기물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WTO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으로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고, 강력한 규제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유재성 그룹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ISO-14000이나 ISO-9000 인증획득시는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나 국내 인증인 친환경기업지정은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고있으며, 국제인증기관보다 더 까다롭고 객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ISO-14000, 9000 취득시는 자동적으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해 주는 제도를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컨설팅회사가 국내에는 없고 외국에서 대거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환경친화기업 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 그룹은 환경관리공

단을 통해 무료 컨설팅하고 싶습니다.

(주)태평양(안정림 환경보전위원회 이사) : 환경관련법이 많은 관계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쉽게 해석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업종별로 구분하여 쉽게 분류된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개정 및 제정시 입법예고 시일이 너무 짧고 정부 주도로 하지 말고 이해당사자와의 공청회 등을 거치고 의견제출일도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말고 여유를 주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친화기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친화기업지정 제도는 한 번 떨어지면 1년동안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신청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현대전자산업(정윤영 환경안전부부장) : 오·폐수 허용기준중 97년 1월 1일부터 질소(N), 인(P) 규제를 하나 질소(N), 인(P) 처리기술이 국내에는 미흡하여 외국기술 도입관계로 로얄티 지급을 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허용기준을 완화 하는 방안과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은 없습니까?

국제협력관 부이사관(최양일) : 질소(N), 인(P)의 규제는 국민소득 2만불, 3만불 국가가 되더라도 필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허용기준을 완화한다

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외국기술을 도입해야하므로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2000년대 환경시장이 6천억불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룹차원에서 연구·개발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기술정책과 과장(김상일) : 질소(N), 인(P) 제거 기술은 국내 기업인 풍림산업, 대우건설연구소, 삼성건설연구소에서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아제약(김시종 환경사업부 차장) : 환경부에서는 환경보전형 영농을 확대하고 있는데 농림수산부의 유기농법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농림수산부에서는 유기농법에 관한 자금지원만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처리방류에만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전형 영농방법 확대를 위한 지원(유기농법)의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 축산업계는 영세한데 법률상 정화방법을 퇴비화, 액비화 저장조, 활성화법을 예시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개발되었을 때 인정해 줄 수 있는 지 알고 싶고, 기업이 연구할 때에는 연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정책실장(정진승) : 환경친화적 영농은 환경부 혼자로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부와 저희 부처가 협동으로 공동작업중에 있습니다. 미비한 점을 계속 보완하여 금년말, 내년초쯤 대안마련이

될 것입니다.

동아제약(김시중 환경사업부 차장) : 현재 부속시킨 비료와 액비에 대한 기준이 환경부나 농수산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아건설(최환세 환경사업실 실장) :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방안중 수도권 김포매립지에 대한 KDI 중간보고가 나왔습니다. 기초시설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예로서 모델화하여 홍보한다면 지자체에서 실시토록 하는 방안과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대기업 참여시 국민의 여론과 중소기업의 불만의 소지가 있는데 이를 무마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에서는 현재 ISO-14000 독일 컨설팅사에 가인증 받은 상태에서 건설현장에 조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ISO-14000인증을 받고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따로 받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므로 앞으로 환경친화기업 지정과 ISO-14000 인증에 대해서는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한화그룹(한승호 비서실 이사) : 세계는 각종 협약과 국제기구를 통해 "국경없는 환경규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위해서는 관의 주도가 아닌 환경

부와 기업간의 발전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책수립시 관련기업의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해 주고, 정책연구시에 기업의 연구원을 객원연구원으로 참여시켜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위관리자를 위한 환경법, 환경정책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교육전개시 환경보전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에서 실시토록 한다거나 전국에 지부를 갖고 있는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앞으로도 환경부와 기업간의 정례적인 의견 교환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친화기업제도 자체를 ISO-14000 국제표준과 관련해서 정책변화를 추진하여 친화기업인증을 받으면 ISO-14000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체크리스트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범규위반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규제행정에서 선도 행정으로의 변화한 것은 좋다고 봅니다만 기업선도행정의 입장에서 폐수10%줄이기, 폐기물 감량화 지침 등 시행과정중 의무화하면 기업은 무리가 따르므로 이에 대한 반영도 필요합니다.

한국전력(정서호 환경기술부 부장) :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소음·진동, 그리고 일반환경 즉 수질, 대기, 폐기물 등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친화기업으로 신

청이 가능합니까?

기술정책과장(김상일) : 현재 추진하고 있는 G-7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도 사후처리보다 사전오염 예방쪽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환경기술이 사후처리에 치중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안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기업에서 많은 참여로 기술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청정기술개발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부이사관(최양일) : 총량규제정책 등 환경부 정책에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LG전자(오희순 환경안전팀 팀장) : 환경친화기업 지정 운영시 기업의 경제적 투자문제를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경친화기업지정 제도가 총량규제 정책으로 가기 위한 것인지, 물질수지 Input, Output 기록 등 총량규제 실시에 따른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기업 제도를 사전오염물질제거로 추진해 갈 때 사후처리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대기업이 솔선하여 지역별로 폐기물처리업 등을 실시할 때 관련법 등에 관한 관련부처간 문제점 해소가 있어야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입니다. 한편 기업에게 있어서 환경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전 분야에 걸쳐 3-6개월 코스로 교육 시킬 기관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합니다. 현재 기업에서는 중간경영자 등 환경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자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협회와 같은 중앙 및 지방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나 교육기관에서 3-6개월간 환경부, 그리고 각 환경전문가를 강사로 환경전문 교육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환경센터건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실장(정진승) : 환경부와 기업은 대립적이 아닌 상호협조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보전협회의 역할이 미진하였는데, 앞으로 환경부의 사정을 제일 먼저 아는 단체이므로 법해석 및 정책, 국제적 움직임(WTO, OECD 등 각 분야별로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가장 빠른 정보를 취하여 중간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이에 주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기술지원방향으로 민간시설에서 요청시 지원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기초시설의 민영화시 기업이 필요한 사항과 애로 사항 등은 기업의 조언은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환경부로 보고될 수 있도록 협회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영화에 따른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세미나나 공청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영화를 위해서 지자체들의 기초 시설 관련사항 들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금년부터 지자체들을 환경부가 고발하여 경각심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진용 환경연구팀 팀장) : 환경마크제도를 확대하고 재활용 생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혜택을 부여 해 주었으면 합니다. WTO 10개 의제 준비와 OECD가입에 따른 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G-7프로젝트 과제중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제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보전협회 (박재주 사무총장) : 각종 국제협약 논의에 따른 해설 및 정보 제공은 우리 협회가 각 기업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중간경영자뿐만 아니라 환경관계자들을 위해서 3내지 6개월, 혹은 단기 코스로 환경법률 및 정책, 각종 국제협약 동향 등 환경전반에 걸친 환경경영 전문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협회가 ISO-14000 환경성평가 등 관심을 갖고 자료·정보제공을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친화기업 지정과 사후 개선계획 이행사업 등에 대한 지침 및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맞춰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회원사 및 기업에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환경에 관해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초시설에 따른 민영화를 위해 관과 기업의 중간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협회는 전국 11개 지부와 함께 정부와 기업간에 정책 및 행정에 관해 적극적인 교량 역할을 다하겠습니다.